

#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 1 출장 개요

### □ 출장목적

- 본 연구의 사례연구 국가인 그리스의 복지 사각지대와 부정수급 대응에 대해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 그리고 전문가를 방문하여, 공공부조 및 노인대상 복지 정책 특성에 따른 사각지대 및 부정수급 대응 방향과 이를 통한 한국에 대한 정책적 함의 도출

### □ 과제명

- 사회보장분야사각지대축소와부적정지출관리방안연구:노인에대한공공부조제도를 중심으로

### □ 출장기간

- 2019년 06월 23일(일) ~ 2019년 06월 29일(토)

### □ 출장국가(도시)

- 그리스(아테네)

### □ 출장자

- 황남희 연구위원

### □ 일정요약

| 일자   | 국가(도시)   | 방문기관                | 면담자  | 주요 활동상황  |
|------|----------|---------------------|--|--|
| 6.23 | 인천       |                     |  | 이동   |
| 6.24 | 그리스(아테네) |                     |  | 도착   |
| 6.24 | 그리스(아테네) | 주그리스<br>대한민국<br>대사관 | 임수석 대사관,<br>강준모 재경관  | - 사회경제 및 사회보장제도 일반<br>현황과 특성                   |
| 6.25 | 그리스(아테네) | ETEAP               | Nikolaos Bikis(Governor),<br>Afroditi Niforou(Head of Dept.) | - ETEAP의 역할 및 현황<br>- 2017년 보조연금(Supplementary |

|      |          |                    |   |  |
|------|----------|--------------------|---|--|
|      |          |                    | of Internal Affairs), Katerina Sarakinioti ( Head of Dept. of Insurance), Eleftheria Zaharaki (Head of General Direction of Insurance and Pensions) | fund) 통합 배경 및 변화<br>- 보조연금 관련 사각지대, 부정수급 관리 현황 및 특성  |
| 6.26 | 그리스(아테네) | EFKA<br>본사 및<br>지사 | Ioannis Skopoulis (Vice-director), Ioanna Gati-Spyropoulou (General Director of Strategy and Development), Ioannis Zacharis (OPEKA) 등 11명           | - EFKA의 역할 및 현황<br>- 2017년 기금 통합 배경 및 변화<br>- 연금(main fund) 관련 사각지대, 부정수급 관리 현황 및 특성<br>- 지사 라운딩                                     |
| 6.27 | 그리스(아테네) | IOBE               | Michael Vassiliadis (Head of Macroeconomic Analysis and Policy Unit), Georgios Gatopoulos (Senior Researcher), 강준모 재경관                              | - 그리스 경제개혁 및 사회보장제도<br>- 연금 제도 개혁과정<br>- 노인 복지 관련 사각지대와 부적정 지출 특성 등  |
| 6.27 | 그리스(아테네) | 노동부                | Despina Patouna(Director of Main Pension), Sotiria Papaioannou(Head of Section of Successive Insurance)   | - 연금제도 주요 연혁<br>- 노인 대상 수당(national pension, contributory pension) 운영 현황 및 부정수급, 사각지대 관리 현황<br>- Social solidarity allowance과 GMI 현황 |
| 6.28 | 그리스(아테네) |                    |   | 이동   |
| 6.29 | 인천       |                    |   | 도착   |

## 2 출장 주요내용

|   |   |
|---|---|
| ①   |   |
| 일시  | 6.24(월) 11:30~14:30                     |
| 장소  | 아테네(주그리스대한민국대사관)                        |
| 참석자   | 임수석 대사관, 강준모 재경관(주그리스대한민국대사관), 황남희(보사연) |
| <b>1. 그리스 일반 현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명, 인구) 국명은 그리스 공화국(The Hellenic Republic)이며, 수도는 아테네(Athens). 국토 면적은 한국의 1.3배 수준이며 인구수는 1,099만명(2016년 기준)</li> <li>○ (정치체제) 정부는 대통령제를 가미한 내각책임제의 정부형태. 대통령은 일례적이고 상징적인 권한만 갖고, 의회와 총리 권한 강화</li> <li>○ (언어, 종교) 그리스 사용. 1977년 민중어가 그리스의 표준어로 지정되어, 고전</li> </ul> |   |

그리스어는 현재 사법행정, 일부 단과대학, 교회를 제외하고 공식적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있음. 인구의 98%가 그리스정교(Greek Orthodox) 신자

- (지방행정) 행정구역은 13개 지방(region)과 1개 자치주(autonomous state)로 구분. 13개 지방 54개 도(prefecture), 각 도에는 시(Dimos-Municipality) 900개와 지역사회(Koinotita-Community) 133개로 각각 구성되며, 1개 자치구는 아토스 산(Mount Athos)임. 지방 책임자는 중앙정부(내부무 장관)가 임명하며, 중앙정부 정책 이행과 중앙-지방간 정책조화를 도모. 도, 시, 지역사회의 기초단체장은 4년마다 직접 선거로 선출
- (경제) EU가입국으로 유로화를 사용하며 1인당 GDP는 17,901만불(2016년 기준)로 EU가입국에서 낮은 편
- (산업) 제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하며, 관광·해운업 등 3차 산업 중심(산업별 GDP 구성비: 1차 3%, 2차 12%, 3차 85%, 2011년 기준 그리스 통계청 공식발표한 최신통계)의 생산구조. 전세계 선박의 16.5% 소유, 해상운송 물동량의 4분의 1 그리스 선박에 의해 운송되어 세계 1위의 해운강국. OECD 가입국 중 자영업 비율이 매우 높아 2위인데, 인구규모가 1천만명을 조금 넘는 등 시장규모가 작고 폐쇄적이어서 가족중심의 개인기업 발달. 1980년대 주요 기간산업의 국유화가 이루어지고 공공부문의 근로자가 크게 확대되었으나, 2010년대부터는 민영화를 추진(특히 에너지 부문). 그리스전력공사, 가스공사 등 국외에 운영권을 넘기고(투자받아) 수익은 정부가 보유하는 형태로 진행됨
- (구제금융) 2010년 5월 제1차 구제금융 지원(730억 유로) 조건으로 임금 및 연금 삭감 등 긴축재정 정책 실시로 사회불안정 가중, 제1차 구제금융에도 불구하고 상황 오히려 악화되었으며 2012년 3월 제2차 구제금융 지원(1,580억 유로)으로 경제개혁 지속. 2015년 IMF 상환 채권 미지불로 위기로 '국가부도' 직전이었으나, 미국과 유럽의 해결안 모색으로 '만기체납상태'로 지불 연장. 2015년 8월 제3차 구제금융(860억 유로)은 이전 보다 더욱 가혹한 조건(조세, 연금, 은행, 상품시장 개혁 및 민영화 조치 시행)으로 협정하여 경제개혁 지속 추진하였으며 2018년 8월 국제금융체제 종료

□ 제2차 구제금융(2015.7월) 합의에 따른 개혁조치 필요사항

- (재정수지) 국가부채 감소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재정수지 흑자 전환을 위한 긴축조치 실시
- (연금개혁) 무적자규정(zero-clause) 또는 대안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연금 삭감 등 추진
- (상품시장) 상점 일요일 영업 허용, 영업시간 제한 폐지, 제과점 영업제한 폐지, 화물선 운송업 등 주요 폐쇄직종의 개방 요구
- (에너지시장) 전력송신네트워크공사 등 민영화 추진
- (노동시장) 단체협상권, 노동쟁의행위, 대량해고 등 강도 높은 개혁 실시하며, 과거 정책으

로 회귀 금지

- (금융시장) 부실채권 정리, 시중은행들의 지배구조 강화 등
- (민영화) 500억 유로의 신민영화 기금 신설 및 민영화 사업 적극 추진

□ 유로그룹회의(2017.4.7.)에서 합의된 추가 개혁조치

- (추가적 긴축조치) 연금수급액을 2019년까지 최대 18% 삭감하고, 2020년에 소득세 면제기준 하향 조정(8,636→5,700유로)하여, GDP 2% 규모인 36억 유로 예산 절감
- (기초재정수지 목표 초과 달성시 인센티브) 기초재정흑자 목표(3.5%)를 초과 달성시, 긴축 완화 조치 추진 가능
  - \* 저소득층 주거보조금 지원, 초중고등학생에 대해 급식지원 확대, 자영업자 소득세 인하(22→20%), 법인세 인하(29→26%) 등
- (노동시장 개혁조치) 대량해고시 노동부 장관의 사전 허가 폐지. 2018.1월부터 노동자들의 단체협상권 복원 등
- (에너지 시장 및 상품시장 개방) 그리스전력공사는 자사 보유 갈탄화력발전소와 탄광의 40% 매각, 상점의 일요일 운영 등 개점시간 확대, 일반의약품의 약국 이외 판매 허용 등
- (중기재정목표) 2018-2021년간 GDP 3.5%규모로 기초재정수지 흑자 목표 설정

자료: 주그리스대한민국대사관(2017.10), 그리스 개황, p.79-80.

○ (사회보장제도) 그리스의 사회보장제도는 국가에서 관장하며, 모든 국민은 의료혜택과 연금을 받음

현재 그리스에는 의료와 연금을 동시에 관리하는 보험연금공단이 직종에 따라 있으며, 최근 몇 년 전부터 공무원들은 중앙정부 공무원보험연금공단으로, 민간인들은 일반직장인보험연금공단(IKA)으로 통합되고 있음. 최근에는 통합사회보장기금(EFKA)으로 보험료 징수 및 지급 통합 관리 운영하고 있음

□ 연금제도

- 현재 일반 직장인은 의무적으로 EFKA에 가입해야 하고, 매월 총소득의 41.06%(피고용자: 16.00%, 고용주: 25.06%)를 기여금(노후, 질병, 출산, 보육, 실업, 산재 대비 피고용주, 고용주 부담분이 각자 포함)으로 납부
  - 퇴직 후 법정 연금을 지급받게 되며, 기타 사회복지수당으로 의료지원금, 출산지원금, 가족수당, 실업급여, 산업재해보상 등이 있음
- 그리스의 사회보장제도 위기는 여러 요소에서 비롯되었는데, 2009년부터 시작된 부채위기로 2010년 5월에 체결된 EU·IMF 협정에서 우선적으로 개혁이 요구되었던 부분임
- 과거 그리스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 고용자, 고용주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기여금 비율
  - 과도한 의료지출로 인한 연금지급 부담 : 과거 의료보험료와 연금보험료가 통합부과하여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분리된 상태임

- 공단의 자산 활용 관련 법적 불확실성(정치적이나 사행적 목적으로 사용될 소지)
- 조기 퇴직문제 : 연금개혁 예고시 조기퇴직 제시. 그래서 조기 퇴직 촉발
  - ※ 특수 조기퇴직은 퇴직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상해 공무원,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과 같은 특수직공무원의 퇴직에 대해 정년퇴직연금을 부여하는 특별한 관례였으나, 2008년까지 정부가 재정 곤란을 이유로 국영전력회사, 통신회사, 철도회사 등 대규모 국영기업의 직원들을 자진 조기 퇴직시킬 경우에도 근무연수, 기여한 보험연금부담금 규모와 상관없이 정년퇴직연금을 부여하는 비현실적인 관행이 있었고, 이로 인해 정부 재정과 공단의 부담 증가

□ 국민의료제도

- 1983년 각 보험연금공단과 국립의료기관을 포함한 국립의료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설립 후 모든 국민에 대한 의료혜택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금 기여금의 일부로서 의료기금을 납부함
- 그리스의 국립의료체계는 보험연금공단과 계약된 개인의사 또는 소규모 단과병원을 통한 진단차원의 1차 의료체제와 응급치료, 종합검진, 입원치료 차원의 종합병원을 통한 2차 의료체제로 구분됨
- 현재 국립병원들은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나, 병원마다 매일 근무하는 과가 돌아가며 바뀌기 때문에 방문 전 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함
- 그리스의 의료보험 시스템은 연금기금과 연계 운영되어 있어 심각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임

자료: 주그리스대한민국대사관(2017.10), 그리스 개황, p.90-91을 토대로 업데이트

## 2. 그리스의 사회보장 관련 최근 동향

-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경제위기가 발생하여 2010년부터 3차례에 걸쳐 약 3,100억 유로(확인 필요)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음
  - 그리스 경제위기는 1) 유로존 가입에 따른 환율조정기능 상실, 2) 선심성 사회복지 지출(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2000년 18.7%→2015년 25%, 유럽통계청, 주그리스대한민국대사관 2018) 확대 등에 따른 국가부채 급증(2006년 103.6%→2016년 179%), 3) 대외환경에 취약한 경제구조, 4) 부정부패, 과도한 지하경제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
  - 구제금융의 지원대가로 채권단은 재정건전성, 민영화, 연금개혁, 시장개방 등 개혁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재정긴축 과정에서 복지 축소(대부분 연금, 의료), 시장개방 등에 따른 사회 혼란을 경험함
- 2018년 8월 8년 간의 구제금융체제에서 벗어났으며, 최근 경제가 성장세로 돌아섰으나 실업률 하락 등 경제 회복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약10년 만에 구제금융없이 그리스 정부 독자적으로 편성한 예산은 그간 추진한 긴축정책을 완화하고 세금 인하, 복지 및 실업지원 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개인 및 기업의 세 부담 완화 : 2020년부터 법인세 매년 1%p 인하(29→25%), 2002년부터 배당소득세 5%p 인하(15→10%), 재산세 평균 10% 인하
  - 사회보장기여금 인하 : 전문직종, 자영업자, 농민을 대상으로 연금보험료의 약 1/3 인하. 보조연금 보험료 및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의 퇴직금 기여금 인하
  - 사회보호 확충 : 보조연금 의무화 등을 통해 최저소득보장 추진, 긴축정책 중 비정규직 증가 등 고용의 질 악화(실업자의 74% 1년 이상 장기 실업상태, 월 500유로 이하 저임금 단기근로자 증가 등) 등에 대응한 사회복지제도의 구조적 개혁 지속 추진
    - \* 대규모 해고 용이, 산별 노사협상에서 기업별 노사협상으로 전환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단기 중심의 일자리 양적 확대
  -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사회보호 확충 : 청년층 취업 촉진을 위해 24세 이하 청년취업자의 사회보험료 본인 부담 100%, 사업자 부담 50% 지원(청년수당)
  - 구제금융 지원 중 연금삭감 미반영 : 2019년 1월 시행하기로 합의한 연금삭감 내용 미반영
- 그리스는 금년 10월 총선 예정이었으나, 5월 유럽의회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급진좌파연합(시리자)가 패하자 치프라스 총리는 총선을 3개월 앞당겨, 7.7조기 총선을 단행
  - 출장 후 확인결과, 중도우파인 신민주당(대표: 키라이코스 미초타키스)이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급진좌파연합(시리자) 보다 높은 득표율을 보이며 정권 교체

|                 |  |
|-----------------|--|
| ②               |  |
| <b>일 시</b>      | 6.25(화) 11:00~14:00  |
| <b>장 소</b>      | 아테네(ETEAP)   |
| <b>참석자</b>      | Nikolaos Bikis(Governor, ETEAP), Afroditi Niforou(Head of Dept. of Internal Affairs, ETEAP), Katerina Sarakinioti (Head of Dept. of Insurance, ETEAP), Eleftheria Zaharaki (Head of General Direction of Insurance and Pensions, ETEAP), 전해원(아테네대학교), 황남희(보사연) |
| <b>1. 기관 설명</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명) ETEAP(보조연금 및 연금일시금(일회성 급여)의 통합 기금, ETEAEP으로도 표기)</li> <li>○ (개요) ETEAP은 2017년 1월 1일부터 ETEA에서 기관명이 변경되었으며, 공법의</li> </ul>  |

적용받는 법인(법률 4387/2016). Single Subsidiary Insurance Fund와 그 복지기금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노동부, 사회보장국 및 사회적 연대의 감독을 받음

- (목적) 기금 목적은 (a) 수령자에게 노령, 장애 및 사망에 대한 월별 보조연금 제공, (b) 수혜 대상자에게 일회성 급여(연금일시금) 지급
- (조직) ETEAP의 연금운영부서 : 5개 부서 supplementary fund management, 4개 부서 lump-sum benefits management

## 2. 주요 논의내용

- 기여방식으로 운영되는 그리스의 연금은 주연금(main pension)과 보조연금(supplementary pension) 및 연금일시금(lump sum benefit)으로 구분됨. 자영업자의 경우 lump sum benefit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었으나, 2014년부터 자영업자도 적용대상이 됨
  - \* 연금일시금(lump sum benefit): 연금수급개시연령이 되면, 우리나라의 퇴직금처럼 1회에 목돈을 받는 것. 즉 그리스는 주연금과 연금일시금을 가입한 경우, 연금수급개시연령이 되면 연금일시금을 1회에 한해 지급받고 이후 매월 연금을 받는 형태임. 연금일시금에 대한 연금보험료(기여금)를 낸 사람만 받음. 1983년부터 가입 및 납부 의무화되었으나, 직능별로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음. 1983년 당시 자영업자는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나 선택적 가입이 가능한 상황이었음
- 무기여방식의 연금은 national pension이 있으며, 조세방식으로 운영됨
  - 기여연금 지급자격인 납부기간 15년을 충족하지 못한, 즉 연금 납부기간 15년 미만인 자는 무기여방식의 연금을 수급 가능
  - 보조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약 60~70%
- 주연금 운영기관은 EFKA, 보조연금(lump sum benefit 포함, 이하 동일) 운영은 ETEAP
  - ETEA → ETEAP(ETEAEAP)로 기관명 변경(2016)
  - 2014년에 FDC(financial defined contribution) 또는 가장 마지막 지급받은 임금(last wage)을 기준으로 연금방식 변경됨
  - 과거 직능별 연금관리기관에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 연금을 계산하였으나, 연금 운영 통합 후 NDC(non-financial(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방식으로 연금급여 계산에 적용(2015년부터)
  - 과거 보조연금(21개 기관)과 연금일시금(8개 기관) 별도 운영 → 현재 통합(기존 100여개의 직능별 연금운영기관 통합됨). 통합된 연금운영방식에 불만이 있는 연금 가입자들도 있었으나 개혁단행(의무화)
- 제3차 구제금융 이후 연금제도 개혁안 주요내용
  - 40년 이상 연금납부자는 60세 → 62세로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

- 연금수급개시연령 65세 → 67세로 상향조정
- NDC SYSTEM 보조연금 기여율 단계적으로 조정(연금일시금 기여율 4%): 1/6/2016~31/5/2019: 7% → 1/6/2019~31/5/2022 : 6.5% → 1/6/2022~ : 6%
- NDC는 개인계좌 관리 운영체계임, 직능별 상관없이 PAYG 가능
- ±수익률(기관의 연금 운영수익) 변동 적용
- 정부운영자금의 투자기관이 별도로 존재(공공기관: EDEKT, 2009년부터)
- Annual replacement rate: 0.45%로 적용하여 재계산하였으나, transitional period 적용사례 검토를 거친 후 향후 적용예정임
- \* 적용시점은 2013년 1월부터이나 transitional period(2011~2012년)에 속한 연금 가입자가 대부분이어서 적용 어려움 : 연금청구심사의 지연의 이유로 작용
- 2011년부터 공공부문은 기여횟수 14회 → 12회(2회 보너스 삭감: 부활절 50%, 여름휴가 50%, 크리스마스 휴가 100%), 민간부문은 자체적 운영(14회: 2회 보너스 지불 유지 하는 경우 14회 연금납부, 연금수여는 연간 12회 적용)
- \* 연금 기여횟수에 차이 없이 급여액에 대한 연금납부금액이 결정되므로 연간 연금기여횟수는 큰 의미 없음(연금납부 총액이 중요)

○ 부정수급과 관련된 시스템은 세무시스템 연동, 연금계좌인출 정보 조회, 장례비 지원에 따른 정보 공유 등이 있음

- 연금시스템과 세무시스템(그리스, taxisnet)이 연동되어 수급요건중 총 납입금액 과 납입기간을 알수 있음. 대부분의 유럽에서 연동 운영. 그리스의 경우 최근 연동 도입됨(2012년부터)
- 해외 거주시 EU가입국내 거주한 가입자의 연금수령 가능. EU가입국 이외에도 국가간 협정으로 연금수령 가능한 국가(미국, 캐나다 등)의 거주자도 연금수령 가능
- 인출정보조회가 가능(EU내)하여 가입자 사망시 계좌확인을 통해 장기간 인출기록이 없을 경우 환수 가능
- EFKA의 장례비 지원: 그리스는 정교회국가로 화장 불법(화장시 해외에서만 가능). 대부분 전통적인 매장방식의 장례절차를 밟음. EATEAP에도 사망자 정보 공유됨(부정수급 관리 기능)
- 그리스는 1인 독거노인가구 많아 간병인이 수급권자 사망후 연금부정수급 사례가 종종 발생, 이웃 등이 이를 연금관련기관에 제보하여 사례 보고

○ EU Fund로 전산화/자동화 추진 예정임

- 연금수급신청자의 접수서류 중 일부는 전산확인 불가
- 현재는 약700여명의 기관 직원이 전산화되지 않은 서류를 모두 심사하면서 연금지급 절차가 지연되는 사유의 하나
- EFKA의 자동화시스템 극히 일부만 진행된 상태임(EFKA 통합 이전의 IKA의 경우 2002년 전산화가 완료됨. 그러나 2002년 이전 서류는 아직 전산화되지 않은 상황)

|   |   |
|---|---|
| ③   |   |
| <b>일 시</b>  | 6.26(수) 10:00~13:00   |
| <b>장 소</b>  | 아테네(EFKA)   |
| <b>참석자</b>  | Ioannis Skopoulis(Vice-director, EFKA), Ioanna Gati-Spyropoulou(General Director of Strategy and Development, EFKA), Ioannis Zacharis(OPEKA) 등 11명, 전해원(아테네대학교), 황남희(보사연) |
| <p><b>1. 기관 설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명) 통합사회보장기금(Unified Social Security Fund; 이하 EFKA, <a href="http://www.efka.gov.gr/">http://www.efka.gov.gr/</a>)</li> <li>○ (기관간 역할분담) EFKA(주연금), ETAEP(보조연금), OPEKA(복지수당: Social Security) 으로 역할 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FKA는 주연금을 통합운영하는 기관임. 그러나 단순한 연금운영기관 통합을 넘어서서 민간/공공/직능별 구분없이 통합된 연금보험료 및 연금수급액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li> </ul> </li> </ul> <p><b>1. 주요 논의 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FKA 설립 배경 및 운영주체 역할분담 변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34년 연금제도 도입(직능별), 1980년대 327개의 직능별 연금운영기관 있었으나 점차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1997년에는 28개, 2008년에는 13개의 연금운영기관 존재 (5개 주보험, 6개 보조연금, 2개 공공부조)</li> <li>- 2008년부터 IKA-ETAM(Social Insurance Institute, 임금근로자 주연금과 보조연금) 체계로 연금 운영되었으나, 2017년부터 EFKA(주연금)과 ETAEP(보조연금)으로 분리 운영</li> <li>- 연금과 건강은 동일 기관에서 함께 운영하였으나 2012년부터 연금과 건강보험 운영 구분되어 건강보험은 EOPYY(국가의료서비스제공기구)에서 독립 운영</li> <li>- KEAO는 사회보험료 미납 추징기관으로 독립적으로 운영. EFKA내의 감사부서에서 미납사례 조사(고용주가 근로자 채용하면 사회보험신고 의무)후 적발시 KEAO가 실제 추징업무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li> </ul> </li> <li>○ EFKA의 현황과 부정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 2018년 구조조정으로 인원 감축 : 2010년 12,000명 -&gt; 2018년 7,950명(35% 감축)</li> <li>- 현재 조직은 (Director 1, vice-director 2 ) 43개 부서로 운영</li> <li>- 2018년 재정현황: 수입은 410억 유로, 지출은 406억 유로로 재정흑자기록</li> </ul> </li> </ul> |   |

- 3백만명의 주연금 수급
- 비경제활동인구(보험료를 낼수 없는 사람)는 크게 노인(외국인 체류자 포함)과 청년으로 볼수 있는데 노인은 사회연대수당(OPEKA), 청년은 OAED에서 지원
- EFKA의 부정수급 감사 담당이 있으며, 경제위기로 특히 영세업체의 보험료 미납율이 높아짐
  - 예: 고용주가 고용신고를 고의로 하지 않아 고용인이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 가입 불가)에 따라 국세청과 협력하여 세금미납 업체의 경우 특별히 주의예시하여 사전에 위기 관리(IT SYSTEM FOR RISK ANALYSIS)
  - 고용주의 불법고용 적발시 고용주가 고용인당 1만유로 벌금, 3년 이내 재적발시 3만유로(1인당), 이후도 누적적으로 벌금 증가

○ OPEKA(Organization for welfare benefits and social solidarity)는 2018년 설립된 사회연대기금 운용기관. 복지 관련 현금 및 서비스 지원

- 67세 이상 노령자에 한해 최소연금(360유로/월)미만 수령자에게 사회연대수당으로 차액 지불. 67세 이상 수혜자 중 그리스 자국민은 극소수이며 대부분이 이민 근로자가 수령
- 서비스 지원의 경우 실례로 그리스 전역의 초등학교 대상, 부모가 미취업인 가정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을 조사하여 해당 학교의 전학생 무상급식 지원
- 가족수당, 장애수당, 저소득층, 연금보험이 커버되지 않는 자가 서비스 대상
- 보험기간 15년 미만 또는 보험납부 이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 월 360유로(12회/연간)의 사회연대수당 지원
- 이민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하여 연금 지불 절차 진행
  - 연금수령액이 100유로일 경우 기초연금수당인 360유로와의 차액인 260유로를 OPEKA가 지원. 현재 총 수급자는 35,000명(2018년 기준)
  - 이민자는 최소 납부기간은 15년이나 10년 이상 근로요건 충족시 연금청구신청 접수 가능(접수 심사기간이 상당기간 소요), 자국내 체류기간 35년 이상(예로 25년 체류자일 경우 기초연금수당 360유로/25년을 삭감하여 지불, 즉 1인 가계 기준 연소득 4300유로 미만(부부소득 기준 경우 8600미만), 부동산 60,000유로 미만
- 사회연대수당 수급 신청 서류심사시 자격확인
  - 주연금 받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EFKA발행 증명서를 필수로 요청하여 전산검증 가능한 시스템 구축되었으나 대부분 이민자들이 전산이 아닌 서류 접수로 진행되고 있음
  - OPEKA에서도 부정수급 사례가 있어 300명의 내부 직원이 감사 및 실사 업무 담당

|  |  |
|--|--|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20%;"> <p>ΕΦΚΑ<br/>(ΕΦΚΑ)<br/>통합사회보장기금</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20%;"> <p>ΕΟΡΥΥ<br/>(ΕΟΡΥΥ)<br/>국가의료서비스기구</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20%;"> <p>ΟΡΕΚΑ<br/>복지 및 사회연대기구</p> </div> </div> <div style="margin-top: 10px;"> <p>ΙΚΑ<br/>(TEAM)<br/>(일반임금근로자)</p> <p>ΟΑΕΕ<br/>(자영업자 보험기관)</p> <p>ΟΓΑ<br/>(농업인보험기관)</p> <p>ΕΤΑΑ<br/>(변트사연금재단)</p> <p>그 외 의사, 언론인, 기술자 등 직능별 다수기관 존재</p> </div> |  |
|--|--|

|            |  |
|------------|--|
| ④          |  |
| <b>일 시</b> | 6.27(목) 10:00~11:30  |
| <b>장 소</b> | 아테네(IOBE)  |
| <b>참석자</b> | Michael Vassiliadis (Head of Macroeconomic Analysis and Policy Unit), Georgios Gatopoulos (Senior Researcher), 강준모 재경관(주그리스대한민국대사관), 전혜원(아테네대학교), 황남희(보사연) |

### 1. 기관 설명

- (개요) 경제산업연구재단(IOBE)은 1975년 설립된 사립(private), 비영리(non-profit), 공익(public-benefit) 연구기관
- (목적) 그리스 경제 현황과 전망에 관한 연구 수행, 경제정책결정자들에게 신뢰성 높은 정보(information) 제공과 분석(analysis), 제안(proposals for action) 수행
- (기능) 그리스 경제의 기본구조 및 부문별 문제와 경제 정책 수립 관련 연구 수행, 단기 경제 동향 모니터링 및 분석·경영환경 조사·그리스 경제 전망 및 평가, 그리스 경제 관련 정보 생산, 국외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와 연구협력 및 교류 등
- (연구활동 영역) 거시경제분석, 기업가정신, 경제구조 변화(structural changes), 재정정책, 미시경제분석, 교육과 그리스 경제, 그리스 경제보고서, 비즈니스 및 소비자 설문조사(Business and consumer surveys)

### 2. 주요 논의내용

- 현재 사회연대수당은 연금에 해당되어 67세 이상 노령자가 수급대상인데, EU의 권고에 따라 GMI(Guaranteed Minimum Income)를 전면 도입할 경우 폐지 예정임.
  - 현재 그리스는 노인인구가 아닌 생산가능인구 대상 사회연대수당이 없는 상황

- 이며, 다만 비노인인구 대상 실업자수당(담당기관:OAED) 운영
- GMI도입으로 향후 전국민 대상의 공공부조(현금수당)가 도입될 예정. GMI도입은 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증가상황 및 구제금융 요청과는 별도로 EU의 권고 사항을 따르는 것임
  - 2017년 그리스 일부 지역에서 GMI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는데, 18세 이상 대상이며 경제활동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준이 낮아 최저연금수준(360유로)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에 한해 차액보조 운영
  - 본 제도로 도입 예정이나 전면적 도입시기는 아직 미정. GMI 전면 도입에 따른 수혜자 증가에 따른 재원마련방안을 해당 기관에서 연구중임
- 노인인구의 연금 사각지대 규모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노인인구의 기여연금이나 이의 수급요건이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사회연대수당을 받기 때문에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는 거의 없음
- 현재 연구중인 그리스 연금 관련 보고서 완성시, 제공 가능. 다만 그리스어로 작성

|   |  |
|---|--|
| ⑤   |  |
| <b>일 시</b>  | 6.27(목) 11:45~13:30  |
| <b>장 소</b>  | 아테네(노동부)   |
| <b>참석자</b>  | Despina Patouna(Director of Main Pension), Sotiria Papaioannou(Head of Section of Successive Insurance), 전해원(아테네대학교), 황남희(보사연) |
| <p><b>1. 기관 설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요) 노동부는 연금, 사회연대수당, GMI 주무 부처</li> </ul> <p><b>2. 주요 논의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리스의 사회보험은 단계적으로 발전하였으며, 직능별 연금 도입 관련 주요연혁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36년: 해운업 종사자의 연금보험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운업 등 특수 위험직군의 경우 연금수급개시연령 57세 적용(현재 유지)</li> </ul> </li> <li>- 1851년: 군 장교 및 해운업 종사자</li> <li>- 1855년: 교사</li> <li>- 1861년: NAT(Navy Retirement Fund)</li> <li>- 1861년: 공무원</li> <li>- 1867년: 국립은행 임금근로자</li> <li>- 1882년: 광부</li> </ul> </li> </ul> |  |

- 1907-1908년: 철로건설자(railways)
- 1922년: 민간부문 임금 근로자 의무보험
- 1923-1925년: 제빵사, 향만근로자, 출판업, 담배제조업 종사자
- 1928-1932년: TSAY(Social Security Financial Department), 법조인, 자동차 기술자(TSA, Motorists' Pension Fund)
- 1934년: IKA(Greece Social Security Foundation), 임금근로자 대상 연금운영기관 설립 법적 근거 마련
  - 제2차세계대전 반발로 (임금근로자대상 연금) 1951년부터 실제 보험료 징수 시행
  - TEBE(Fund of Professionals and Craftsmen of Greece), TSMEDE(Social Service organization), 언론업 종사자
  - 1961: OGA(농업 및 기타 직업군 Agricultural Insurance Organization). 사회연대수당 형태의 복지지원 존재
- 2002년: IKA-ETAM(주연금/보조연금으로 구분), 기존의 직능별 연금이 단계적으로 통합화되는 과정에서 주연금과 보조연금으로 구분됨
- 2017년: EFKA-ETEAP으로 기관 명칭 변경하고, 독립 운영됨
- 2018년: 직능별 연금통합과정에서 Welfare는 OPEKA로, Pension은 EFKA로 분류
- 노령연금이 National Pension과 Contributory Pension으로 구분된 것은 연금의 재원에 따른 구분일 뿐이며, 실질적으로 Main Fund와 Supplementary Fund로 구분하면 됨
- 사각지대 및 부정수급 관련 현황
  - 그리스 헌법에 자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므로, 노인의 연금 혹은 소득보장 사각지대는 없다고 볼 수 있음
  - 사망과 관련한 부정수급 가능성 낮음
    - 사망자 장례비용(약 1000유로)이 사망신고시 지불되기 때문이며, 장례비용 집행이 시스템에 기록되어 관리가 명확한 상황임
    - 연금소득도 과세대상으로 세무시스템(Taxisnet)을 통해서도 사망유무 확인 가능
  - 연금수령신청후 2개월 이내(관련 자료 전산화 된 경우) 심사완료. 자료가 전산화 되지 않은 경우 임시로 연금수령(심사기간인 2개월간)가능하며, 연금수령 불가 심사확정이 될 경우 지불된 임시연금 환수(법령: 2016년 4387법, 29조)
  - EFKA전산화로 개인고유식별 가능한 세무번호를 적용하여 이중수급 관리
    - EDIKA(e-government social security): 사회보장 전자확인 시스템으로 부정수급 관리 가능
- EU가입국의 주요 제도 개혁내용은 [www.missoc.org](http://www.missoc.org) (1996년부터 자료 有) 참조
  - EU연합의 주연금 보장제도 관련 법규가 6개월 단위로 업데이트됨

